

# “국제경쟁력 키우려면 규제 바꿔야”... 첨단산업 네거티브 전환

**李,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주제 성장잠재력 회복위해 규제개편 강조**  
국제표준 맞춘 규제 시스템 정비 안전은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총무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

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 체계는 28년 만에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민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

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급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

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규제합리화의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메가특구는 5급3특과 연계해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전 에스원 대표이사)·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태(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맥실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강훈식 “연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대통령비서실장)

**중동 4개국 방문, 에너지 협력 논의 호르무즈 대체 수입선 본격 확보**  
나프타 210만톤 추가 도입 추진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프타(납사)도 최대 210만톤(t)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원유 2억7300만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톤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번 출장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라며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통상자원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원

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 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프타는 지난주 4월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우디,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강 실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며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metro

##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 수출기업에 1389억 추정 신속 투입

**여한구 산업부 본부장, 수출현장 점검 “가용수단 총동원” 수출애로 해소 총력**  
물류비 25% 확대, 바우처 3일 선정

여 본부장이 이날 방문한 기업은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으로, 중동 수출 비중이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무보)를 중심으로 파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 심각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추경 확정 직후인 지난 13일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에 대해 즉시 공고하고,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준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은 2025년 중동 수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 또는 수출 30만 달러 이상이면서 그 비중이 50% 이상 기업이다.

긴급지원바우처는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WRS), 우회 운송비, 현지 지체료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지 창고 보관, 통관, 라벨링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배 늘린 최대 2400만원이다. 중동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피해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 중동현지 애로 해결과 대체시장 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무보는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존 3조9000억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확대(5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3000억 원) ▲수입보험 확대(6500억 원)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1조35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여 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0



metro